2017 Vol. 13
발간월: 2017년 12월



2017-12호

성평등 개발협력이 주류다!
제15차 OECD DAC 성평등 네트워크 연례회의

사회개발실 남청수 전문관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 연례회의란? 02
2017년 젠더넷 연례회의 주요 의제 03
전통적 이슈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04
새로운 이슈 : 난민, 이주 07
새로운 이슈 : 기후변화 08
나가며 10

KOICA 한국국제협력단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 연례회의란?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증여나 차관 등의 원조에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설치하였음.

○ 동 위원회 산하에는 5개의 네트워크를 두어 원조에 관련하여 비교적 여러 분야에 연계되어 있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

-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Network on Gender Equality)
- 평가네트워크(EVALNET: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 환경네트워크(ENVIRONET: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거버넌스네트워크(GOVNET: Network on Governance)
- 분쟁취약네트워크(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 이중 통상 젠더넷이라고 부르는 성평등네트워크는 연1회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회원국 및 국제기구, 국제개발협력 NGO 등의 성평등 추진 관련 실무진들이 참여하여 개발과 성평등에 관한 최근 현안들을 논의함. 올해는 11월 2일~3일 이틀 간 개최되었음.

Sectoral Issue Report

2017년 젠더넷 연례회의 주요 의제

○ 올해 동 연례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성평등 달성이라는 맥락에서 젠더넷의 역할 강화와 집중해야 할 이슈들, 그리고 이를 통한 젠더넷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동 회의 직전인 10월30일~31일에 개최된 DAC 고위급 회의의 논의와 연계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해당 회의에서는 최근 2030 개발의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업방식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DAC 산하 네트워크 간 작업방식 개선 및 네트워크 간 일관성 제고 등 운영 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젠더넷 사무국은 2017-2018 사업계획에 전통적 분야로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취약상황에서의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에 관한 2개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음.

○ 올해 연례회의에서는 젠더넷 사무국의 추진 사항에 대한 회원국 대상 보고, 그리고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이주, 기후변화 및 환경 등에 관한 논의, 그리고 성평등 개발협력의 성과 및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근거기반 접근 강화에 대한 젠더마커 최소기준의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음. 더불어, SDGs의 이행을 위한 공동협력 강화 측면에서 UN Women 여성지위위원회(CSW) 등과의 연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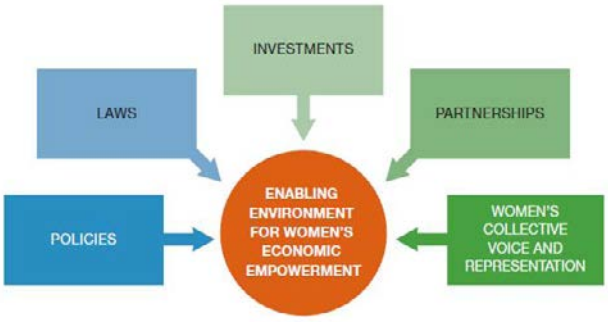
전통적 이슈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개발협력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성평등 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여겨졌고, 최근 국제사회는 OECD DAC, UNWomen 등의 다자기구와 주요 양자기구들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음.

○ 한편, 그간 수입창출이나 수익증대, 직업훈련 등에 초점을 맞춰온 경향은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함. 즉 소득증대 프로그램과 같이 개인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노동시장이나 산업환경, 여성과 남성 간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결국 성불평등 상황의 해소에 한계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SDGs의 출범 이후 국제사회는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음. Simona Scarpaleggia(IKEA 스위스 CEO)는 자신이 부의장으로 참석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추진을 위한 UN 고위급 패널회의'의 참석 결과를 젠더넷 연례회의 참석자들에게 공유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7가지 변혁적 원칙으로 다음을 제시함.

- 소외된 여성이 없어야 함.
- 여성의 참여는 모든 행동에서 필수임.
- 권리(right thing)와 이익(smart thing) 모두에 초점을 둠.
- 근본적 원인에 대응함.
- 국가는 국제인권과 노동 표준을 존중함.
- 파트너십을 중시함.
- 전세계적 노력을 경주함.



출처: 'Leave No One Behind: Taking Action for Transformational Change o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2017)

○ Scarpaleggia가 공유한 회의의 결과는 UN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 'Leave No One Behind: Taking Action for Transformational Change on Women's Economic Empowerment'로 제출되었음. 동 보고서의 핵심은 비공식적 노동, 공식 분야 피고용인, 농업, 여성소유 기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7가지 핵심동력(driver)을 제시하는 데 있음.

○ 7가지 핵심동력에는 '디지털, 금융 등 신기술 자산 구축'과 같은 직접적인 생산 역량의 요소나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같은 전통적인 이슈도 포함되어 있지만, △부정적 규범들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롤모델 증진, △법적 보호 확보 및 차별적 법규 개혁, △기업문화와 관행 변화, △고용과 조달 등에서 공공영역의 관습 개선 등과 같은 규범과 제도, 문화 환경의 변화를 담고 있음. 이와 더불어, '무급돌봄노동 인식, 감소, 재분배'와 같은 기존 자원분배 질서와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발협력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Leave No One Behind: Taking Action for Transformational Change o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2017) ibid.

Sectoral Issue Report

새로운 이슈 : 난민, 이주

○ 이번 젠더넷 회의에서 UNHCR의 Rebeca Eapen(성평등 담당자)은 난민 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취약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그에 따르면, 난민 여성들은 높은 성·젠더기반폭력(SGBV)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적 취약성, 보건, 교육, 수입 창출 등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높은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음. 더불어, 배우자 등 경제적 조력자의 부재로 인해 과도한 가사와 수입창출 노동 부담이 배가되는 위험에 처해있음.

○ UN에서는 이러한 여성 난민 및 강제이주와 관련, 2016년 9월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lc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을 채택하였고, 2018년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on Migration)'의 채택을 계획 중에 있음. 이는 SDGs 10.7(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동)의 이행 맥락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임.

- 이주에 관한 모든 측면 대응
- 국제 이주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
- 이주와 인간 이동에 대한 포괄적 국제협력
- 국제 이주에 관한 약속과 이행 수단
- 2030 아젠다와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이행
- 국제이주 및 개발에 관한 2013년 고위급 대화 선언 이행

새로운 이슈 : 기후변화

○ 환경과 여성 간의 이슈에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여성환경연대 등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여 주목받은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음.

○ 한국보다 생존 조건 상의 취약성이 훨씬 더 높은 저개발국을 다루는 개발협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난민의 발생,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 증가,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등으로 좀 더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자급농, 임업, 수자원 등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에 여성들이 생계를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권리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여성과 남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개발협력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함(Monica Maduekwe, ECOWAS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성 센터).

○ Women's Environment & Development Organization (WEDO)의 Bridget Burns(성평등 담당자)는 'COP23: the Lima Gender Action Plan'에 대한 전망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내에 젠더 포컬포인트를 지명하여 젠더와 기후변화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 진행과 의사소통채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특히 중앙정부와 같은 의사결정단위와 실행단위로의 확산에 핵심요소이며, 에너지 정책 등 국가 수준의 거대 산업정책이 환경 변화와 빌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함.

○ 한편,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IUCN)의 Ana Rojas(에너지·성평등 전문가)는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그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이 거래비용 측면에서 고효용이라는 이유로 정부 및 기업의 투자가 많은 분야이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외에 에너지 소비자로서 주민에 대한 투입이 상대적으로 희박함.

○ 특히, Rojas는 대규모 작업이라는 특성이 있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상위레벨 측면에서 누가 서비스의 이득을 얻는지에 따라 토지, 천연자원, 직업, 보상, 젠더기반폭력 등 그 영향범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하위레벨 측면에서 그 이익의 접근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분배와 활용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함. 이에 기반해,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여성의 포용, 분야 간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행단계에서 인식제고, 이주에 따른 배려, 보상계획, 공동체와의 이익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나가며

○ 금번 젠더넷 회의의 특징은 SDGs 이행 차원에서 성평등 이슈가 개발협력의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어, 젠더넷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성평등 개발협력을 주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분쟁 및 취약 상황에서의 여성, 이주, 난민,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책무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성평등 개발협력에 대한 측정 등 근거기반 접근을 위한 실제적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UN Women 여성지위위원회와 같은 동 주제에 대한 다른 협의체와의 차별성과 공동협력, 그리고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나 G7, G20 등 별도의 재원들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는 성평등 개발협력에 대한 자원 동원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다른 개발협력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성평등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후발주자임. 그러나, 책무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기반의 구축, 분쟁취약 상황, 이주, 기후변화 등 신흥 분야에서의 성불평등 이슈는 국제사회도 초기 단계에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원규모가 적은 한국은 개발협력 선도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고려의 차원에서 이들 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취해야 할 때임.